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을 위한 제안

Guy Sorman*

경제학은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과학이다. 남북한의 경제성차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국가소유제와 중앙계획에 기반한 북한 경제가 실패한 반면, 국내 전통과 결합한 남한의 자유시장 전략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론적·실증적 효율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경제가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은 노동시장을 이야기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다른 시장과 같지 않으며, 노동시장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인간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현실적 이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있어 매우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이지만 헤리티지 지수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은 50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사회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금융 혼란 속에 있으며, 이는 성장에 있어 향후 몇 년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금융 혼란은 대출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금융 혼란이 전 세계 자유시장, 그리고 자유무역제도를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제도 내에서의 위기를 제도의 위기와 혼돈하면 안 된다. 안타깝게도 자본주의 제도에서 거품은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처럼 파생상품 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같은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다.

* 전(前) 프랑스 파리정치대 교수.

1. 한국은 기대 증가에 따른 위험 주기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부의 증가, 교육의 개선, 표현의 자유, 활기찬 민주주의로 인해 모든 국가에서 사회구성원의 기대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위험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더 높은 성장률과 더 나은 삶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개혁을 보다 시급한 사안으로 만든다. 그러나 사람들이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의 실천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개혁은 지속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여론이 그 근거를 이해할 수 없는 좋은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

2. 성장의 대안은 없다

경제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없다면 더 높은 소득이나 보다 공정한 소득정책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복지지수나 행복지수처럼 집단적 만족을 측정하려는 모든 이론적 시도들은 실패해 왔다. 결국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과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아울러 모든 경제 주체를 위한 그리고 경제 주체로부터의 데이터와 투명성이 요구된다. 즉, 데이터와 목표의 공유 그리고 경제 규칙에 대한 공통의 이해만이 경제와 사회 발전을 허용할 것이다.

3. 높은 성장은 창조적 파괴를 요구한다

성장이 갖고 있는 주요한 역설로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낡은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 과정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용되기는 더욱 어렵다. 과거에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이나 생산직 노동자에게 주로 영향을 주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서구와 일본의 경험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화이트칼라 노동자와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직 역시 기술혁신과 경쟁이라는 광풍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기존 일자리에 대한 보호주의는 단기적인 해결방안일 뿐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4. 경제적 자유와 소득 수준간의 관계가 입증되고 있다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이 만든 경제자유지수에 의하면,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성과 간에 분명한 정의 관계가 발견된다. 이 지수가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적 추세를 부인할 수는 없다. 지수에 포함된 변수 중 사유재산과 법 양자간 상호관련성을 보여주는 제도에 있어서 한국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관한 순위는 매우 낮다. 한국은 131개국 중 전반적인 경제 순위는 11위이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해고 비용은 각각 50위와 102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 지수는 정규직만이 아니라 이보다 해고 비용이 훨씬 낮은 비정규직을 포함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한국이 노동시장에서 심각한 경직성을 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효율성은 일자리 창출, 투자, 성장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5. 창조적 파괴와 노동안정성 사이의 교환은 움직이는 과녁이다

창조적 파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어떠한 국가도 아무런 문제없이 안정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높은 유연성간의 균형을 맞출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상황이 보여주듯이 노동시장의 분절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원화를 통한 해법들은 항상 불완전하고 간접적이다. 한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력 배분은 유연성을 달성하는데 있어 실용적인 해결방안일 수도 있지만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부문에서는 이러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부문이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성장의 지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비정규직 고용의 활용이 혁신을 대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부 업종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국민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이분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러하다. 노동시장의 분절은 여성, 극빈층,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 이민자를 가장 큰 희생물로 만들게 될 것이다.

6. 유연성은 새로운 노사관계를 요구한다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고 있다.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의 일자리는 보호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한국 경제전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노동조합이 전체 한국 사회를 대표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만이 국민을 대표하고 법적으로 보호되듯이 노동조합은 조합원만

을 대표할 뿐이다. 작금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외 다른 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오히려 노동조합보다는 정부와 국회가 정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에 관한 규제는 노동자 이해 대변에 민주성을 보다 강화시킬 것이다. 최근 프랑스 정부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공공운송노조의 파업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은 바로 이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론보다 실천이 어렵다. 다른 모든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조합은 국가의 경제생활 전반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 물론 노동조합 지도부는 이러한 자살행위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화에 대해 저항을 오래할수록 중국에는 그 희생자가 결국 자신들이 될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들에서와 같이 한국 경제의 발전은 노동조합 확대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의 전개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정보화시대의 근로자는 중공업이 주도하던 시대에 비해 노동조합 참여에 소극적이다. 또한 시장의 힘, 혁신, 탈산업화 등이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와 의 협상에서 이러한 추세가 절제와 장기적 상호이해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지름길도 존재하지 않는다.

7. 사회안전망이 없다면 유연성을 강요할 수 없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사회 정의에 대한 요구가 높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엄격한 임금조정에 기반을 둔 순수 자유노동시장 해법이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보다 타협적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최상의 안전망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이 최초로 제시한 것과 같은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이다. 이 경우, 모든 국민들은 일생 동안 국가의 재정지원 하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안전감과 결속의식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부의 소득세는 기타 모든 사회적 재분배를 대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산술적으로는 비용이 더 적게 들 수도 있다. 이것이 단지 이상론에 불과한가? 한국의 경우 이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사회안전망은 복지의 덩어리 아니다

해고된 근로자는 실직기간 동안 민간보험이나 공공보험 등을 통해 지원받을 자격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제도를 다루는 담당기관뿐 아니라 해고근로자에게도 이러한 구직기간의 효과적 관리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동

적이라면 구직기간은 짧아질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수용케 하는 유인이 복지 혜택보다 높은 경우라면 구직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모든 선진국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복지의 덫(welfare trap)”이 존재한다. 이러한 복지의 덫을 없애는 것이 항상 정부에게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도 영향을 준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노동 윤리와 사회 가치가 실직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을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실제 실직상태를 숨기고 실질적인 직업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서양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에서는 복지에 기대어 생활하는 것을 사회적 낙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실직자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공공 혜택이 부여된다. 심지어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박물관 무료 입장과 같은 소소한 지원도 제공한다.

합법적인 복지 지원과 직업세계로의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동기부여간의 경계는 매우 좁다. 미국은 실직자를 노동시장으로 내보내기 위해 클린턴 정부 시절부터 복지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여오고 있다. 독일의 슈뢰더 정부 역시 실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면서 같은 조치를 취했다. 올해 프랑스 정부는 실직자가 복지 혜택을 잃게 될 때까지 거부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를 3개로 줄였다.

미국 노동시장은 다양한 숙련수준에서 무한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진입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부여 정책은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서유럽의 경우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부여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유럽 대륙에서는 구인구직 시장을 크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자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는 더 적다. 결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아랍과 아프리카 이민자 출신 실업자가 가장 마지막에 채용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인종주의가 부분적인 원인일 수 있지만, 중국에는 시장의 힘이 교육 수준이 낮고 현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에게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복지의 덫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턱을 낮추는 것, 즉 미국처럼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해고비용을 낮추는 것이 복지 수혜자에 대한 올바른 동기부여와 결합된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국가의 독점은 유연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 근로자의 존엄성, 권리, 최소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

의 의무이다. 그러나 과도한 국가 규제는 근로자를 궁극적인 희생자로 삼으면서 시장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의 최저임금이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는 실업을 증가시키는 모순을 보여주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최저임금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여전히 실직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한다. 최저임금이 낮은 미국에서도 의회가 최저임금을 높일 때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금 상승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합법적인 복지정책과 경제 역동성간의 조정은 결코 쉽지 않다. 정부가 시장을 관리하는 경우 상황은 훨씬 복잡해지는데, 정부기관이 실직근로자를 책임지고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 특히 그 효율성이 낮다.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실직근로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있어 의욕이 강하지 않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부터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정부가 실직근로자의 재취업 절차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이들 민간기관은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민간기관과의 경쟁이 정부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유인이 되고 있다.

정부 고용기관과 민간 고용기관 외에 많은 나라에서 대기업들도 자사가 해고한 근로자의 재취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업계의 창조적 파괴의 원칙과 경제성장을 늦출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사회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다음에 설명할 해고에 관한 특별세, 즉 블랑차드-티롤리(Blanchard-Tirole)세를 도입함으로써 장려·촉진될 수 있다.

10. 혁신적인 제안 : 해고에 대한 세금

현재 IMF의 수석 경제학자인 올리비에 블랑차드는 같은 프랑스 출신의 경제학자 티롤리와 함께 유연성과 안정성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고안하였다. 해고근로자에 대한 세금이 그것이다. 이들의 체계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유롭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해고된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세금을 내야하며, 이 세금은 해고된 직원이 취업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이러한 세제는 고용주에게는 직원들의 숙련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실직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처를 제공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이 이 제안을 연구하고 실험할 것을 제안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래된 규제로 인해 경직되지 않은, 여전히 젊은 사회인 한국은 서양의 고전적 방식을 모방하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해결방안의 도입을 모색하는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11. 인적자본 중개 산업은 국가 혹은 독점기관에 의해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경험은 공공고용안정기관이 실직자들과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 이러한 기관들은 한계집단들이 복지의존자로 전락하게 만든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에서 민간이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가 노동유연성을 위해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직알선업 역시 노동유연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전직알선기관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유연화 수요에 잘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기관들은 노조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부당착취로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해 적절히 규제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간 파트너십은 어떠한가? 이러한 파트너십은 서구 국가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파트너십은 파괴적 창조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때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고 지역 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유용한 포럼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역파트너십이 파괴적 창조의 과정을 더디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산업 역시 일반적으로 노동유연성을 촉진시키는 유용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이 또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더디게 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도 인적자본산업이 성장을 대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서구 국가들에서 고용서비스 기관의 변성이 역설적이게도 현실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인적자본산업이 관료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극빈층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이 유의되어야 한다.

12. 노동력 공급의 확대 - 고령인구와 여성인구의 참여가 필요하다

성장은 노동력 공급의 함수이다. 에드워드 프레스캣(Edward Prescott)의 성장모델에서 보듯이 모든 선진국은 생산과 경영을 위해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장 혁신적인 국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국을 선두로 최근 혁신이 매우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계량적인 결과로 볼 때 노동력의 양이 성장률을 상당히 좌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한 가지 요인은 1980년대 이후 인구나 근무일수의 감소이다. 서유럽의 경우 근무시간 감소로 인해 성장의 속도가 낮아졌는데, 예컨대 프랑

스와 독일의 성장률을 비교하면 프랑스의 주당 35시간 근무가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반면, 독일의 경우 퇴직연령을 늦춘 과거 사회당 정부의 작은 시도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력 공급이 제한받고 있다. 성장에 있어 이러한 제약과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령, 여성의 참여, 이민이라는 3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연령이 유연해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활동적인 삶은 일반적으로 더 나은 건강과 행복을 위한 요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65세를 합리적인 퇴직연령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연령기준이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결정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이나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중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연간 총노동력 공급을 1~2% 늘리는데 있어 여성 참여의 증가는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성차별을 줄이고 육아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기혼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여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고용주간의 공동팀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 사안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종래에는 까다로운 사안인 이민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적어도 민주국가의 정부라면 이민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시장의 힘이 종종 정부 규제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숙련직 근로자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비숙련직 근로자의 유입은 다소 제한해야 한다. 미국과 서유럽의 경험을 돌아보면, 처음부터 엄격한 법적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인구분포상의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현재와 같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 절대적인 숫자가 법적 규칙의 작동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

13. 세계화는 이민자와 내국인 간의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일부 업종에서는 한국인들이 점점 떠나면서 비숙련 이민자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숙련 이민자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 한국 사회가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유연성에 관한 논의와는 별도로, 이민은 한국에 있어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남북이 통일된다면 이 사안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북한 정권이 내부에서 붕괴될 경우 통일은 하룻밤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4. 장기적 처방은 늘 더 나은 교육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역동적인 경제와 유연한 시장에 잘 적응한다. 그렇다면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교육방법도 교육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개방적이고 덜 권위적인 교육 방식은 한국인들이 정보화 경제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자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값싼 노동력은 사라질 것이다. 즉, 비정규직에 대해 그 어떤 규제보다 대학 교육이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나아가 가용할 수 있는 저임 노동력이 사라지면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저임 노동력을 사용하는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한 임금 상승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15. 보다 나은 경제교육이 정치적 과정을 순조롭게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많은 요구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잘못 이해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종종 어릴 때부터 이러한 오해가 시작된다. 프랑스 정부는 고등학교 경제학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사실이 잘못 기술되어 있고 시장에 대한 편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여러 군데 발견되었다. 소수 집단이 교과서 산업을 장악해온 결과, 합리성에 기반한 경제 상식에 반하는 내용을 젊은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한국에서 진행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과거 한국의 성공과 이를 추동한 이유에 대한 무지가 자유시장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의 성공 신화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한국의 경제 역사를 보다 잘 알려야 한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글로벌화, 기업가 정신의 메커니즘을 학교에서 보다 잘 가르치고 대중매체를 통해 보다 잘 홍보해야 한다. 물론 역사와 경제학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사회적 오해를 모두 해소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더 나은 지식이 없다면 대결 양상이 증가하고 그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은 분명하다. **KLI**